

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2023년 6월

전문가 기고

탄소중립과 기후금융

주요 이슈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과제

ESG 동향

국내외 ESG 뉴스

주요 통계

탄소중립과 기후금융



자본시장연구원
송흥선 선임연구위원

파리협정 하면 떠오르는 핵심이 지구 온도상승 2℃ 아래, 최대 1.5℃ 억제일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또 하나의 핵심이 있다. 바로 기후금융이다. 교토프로토콜과 달리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의 물꼬를 탈탄소로 전환하는 기후금융이 핵심적으로 중요함을 (바로 1.5℃ 억제와 똑같이) 파리협정의 목적 조항인 제2조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의 뒷받침 없이는 신뢰와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 2019년 기준 전세계 590억톤의 온실가스를 25년 후에 넷제로로 만들려면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사회·경제·기술 패러다임이 탈탄소 체제로 전환해야 할 텐데, 가히 얼마나 많은 전환비용이 필요하겠는가. 국가와 산업의 이행 의지도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의 진정한 성패는 필요한 기후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 국제기구는 이 전환비용이 매년 전세계 GDP(현재 약 100조 달러)의 3~6%, 금액으로는 연간 2조~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도 2030년 NDC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바탕으로 선형감축을 가정하고 규모를 추정해 보면 기후금융은 현재가치 기준 연간 57~82조원, 누적 1,700~2,400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는 탄소중립이 후퇴 없이 진행될 때 얘기다. 서로 자국 부담을 줄이려는 무임승차와 기회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는 국제정치 역학상, 온난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향후 10년의 골든타임에 대한 기대는 멀어지는 형국이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후 변화 충격이 커지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의 추정치는 어쩌면 감당해야 할 기후금융 최소치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 기준 연간 약1조 달러로 조성되는 지금의 기후금융 규모로는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최근 정부의 2027

년까지 89조원 탄소중립 예산만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는 역부족이다. 거대한 기후금융갭(gap)을 메우기 위한 금융제도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예산과 정책금융에 더해 민간금융이 상업적 원리에 따라 전환금융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유인체계와 조달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환금융의 상업성과 투자성을 높이는 것이다. 물론 없는 상업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고위험 장기투자 성격의 탈탄소 투자에 대해 정부의 마중물 기능을 높이는 민관협력금융(bleded finance)을 확대하는 것이다. 탄소투자의 외부성과 투자의 불확실성이 큰 부분일수록 민관협력금융을 통해 투자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의 InvestEU가 민관협력금융의 선도적 사례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뉴딜펀드를 통해 민관협력금융을 실현한 경험이 있다.

다음으로 탄소시장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탄소시장은 탄소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탈탄소투자의 경제성과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공급 가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다. K-ETS 할당제도를 2030 NDC에 맞게 현실화하고, 기업의 감축투자와 배출권시장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출권 선물, 유럽식 시장안정화제도 등을 도입하여 탄소가격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 탄소시장을 육성하여 산업부문의 다양한 탈탄소 경영활동이 매출과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SG, 해외감축, 외부배출(scope 3) 관리를 위한 공급망 탈탄소 활동 지원 등이 탄소시장을 통해 화폐화될 때,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위한 정책 의지와 자율적인 탄소시장 생태계가 상호작용하며 우리 경제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과제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활동 의미한다.

1. EU의 지속가능금융 현황

지속가능금융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 등 경제 주체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분에서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EU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2018년에 EU는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 3대 목표와 10대 실행계획을 담았다. EU는 이를 토대로 EU 택소노미를 수립, 공시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1) EU 택소노미 (EU Taxonomy)

EU는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를 설정함으로써 무엇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인지 정의하고 판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가 명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이다.

EU 택소노미는 EU의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하고 같은 해 EU 의회와 이사회가 채택한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 TR)을 근거로 한다. EU 택소노미 규정은 6가지 환경목표와 4가지 판정조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판정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EU 지속가능금융실행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

목표	10대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자본흐름 전환	1. EU 녹색분류체계 수립
	2. 녹색금융 표준 및 라벨 도입
	3.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촉진
	4.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금융자문 제공
	5. 지속가능성 벤치마크 개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6. 신용평가 및 시장조사 시 지속가능성 고려
	7. 기관투자자 및 자산운용사의 의무에 지속가능성 포함
	8. 은행 및 보험사 대상 건전성 규정에 지속가능성 고려
투명성과 장기적 관점 육성	9. 지속가능성 공시 및 회계 규정 강화
	10. 지속가능한 기업지배구조 촉진 및 자본시장의 단기 성과주의 지양

※ 출처 : European Commission, 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2018)

EU 택소노미의 환경목표 및 판정조건

6가지 환경목표	4가지 판정조건
1. 기후변화 완화	1.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2. 기후변화 적응	2.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준수(Minimum Social Safeguards)
4. 순환경제로의 전환	4.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 출처 : EU Taxonomy Navigator

2)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EU의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은 2021년 3월에 발효된 제도로, EU의 금융기관이 투자 상품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EU 지속가능성금융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적 기반으로서, 투자자가 투자여사를 결정할 때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이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

SFDR은 다음의 대표적인 조항을 통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 위험과 해당 투자가 환경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제6조: 모든 자산운용사가 지속가능성 위험의 통합과 그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공시할 것
- 제8조: 지속가능성 특성을 촉진하는 펀드가 계약 전 공시에서 환경 또는 사회적 특성, 또는 둘의 조합을 촉진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이 투자하는 기업이 모범적인 거버넌스 관행을 따르는 방식을 명시할 것
- 제9조: 지속가능성 목표를 가진 펀드가 계약 전 공시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지수가 참조 벤치마크로 지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명시할 것

※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시행 및 관련 펀드 현황(2022)

2. 국내 지속가능금융 현황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환경부가 EU 택소노미를 벤치마킹하여 만들어진 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K-Taxonomy)를 공개하였다. 이는 투자기준으로서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규정하여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용이하도록 돕는다. K-택소노미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인 녹색부문과,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인 전환부문에 구분하고 있다. 또한, 6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준수원칙과 4가지 적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K-택소노미의 환경목표 및 준수원칙, 적용기준

6대 환경목표	3가지 준수원칙
1. 온실가스 감축	1.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
2. 기후변화 적응	2.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
3.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3.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있을 것
4. 자원순환	
5. 오염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 보전	

4가지 적용기준

1. 활동기준(경제활동이 활동기준에 부합하는지)
2. 인정기준(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3. 배제기준(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평가기준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4. 보호기준(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지 않는지)

※ 출처 :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021)

또한, 정부는 같은 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단위의 대책을 법제화하였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사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목적의 채권으로, ESG투자 중에서 특별히 환경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절차를 도입하고, 녹색체계 사후관리 체계를 정립하는 등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사회에서 ESG에 대한 주도권이 가장 강력한 EU가 금융권에서의 ESG 제도화에 힘쓰는 궁극적인 이유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기업과 금융상품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금이 자연스럽게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기업과 투자상품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많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두며 실질적인 ESG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금융기관에서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규제가 필요한데, EU는 택소노미, SFDR(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orporate Su-

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등의 규제를 통해 그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EU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활동에 발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이 그린워싱을 지양하며 신뢰성과 투명성이 높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K택소노미, K-ESG, ESG정보공시 의무화 등의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절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ESG 내재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꾸준한 합의와 개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지속가능금융의 시장을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사회책임투자채권 분류에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과 더불어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금융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지속가능연계 금융상품은 ESG 성과 목표의 달성 정도에 따라 대출금리 등을 차등 적용하여 기업의 ESG 활동을 촉진하는 금융상품이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과 지속가능연계대출(SLL)상품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ESG 뉴스



지속가능경영원

최근 EU를 중심으로 ESG가 본격적으로 법제화/의무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급망 실사법, ESG 의무공시,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등 ESG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정부에서도 공급망 실사 지원방안 등 국내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위한 각종 제도 및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어 ESG 현안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요구됩니다.

해외 ESG 뉴스

유럽 공급망실사 의무화... 수출기업 ESG 대응 비상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89932&inflow=N>)

뉴스토마토 | 2023.06.07

EU '탄소국경세' 앞두고 한숨 돌린 韓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3061498421>)

한국경제 | 2023.06.14

'EU 배터리법' 본회의 통과...K-배터리 영향은

(<https://www.etoday.co.kr/news/view/2257649>)

이투데이 | 2023.06.15

EU, ESRS 수정안 공개... ISSB 기준과 '상호운영상' 고려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9>)

ESG경제 | 2023.06.15

EU, ESG 평가업계 규제안 추진... 이제 규제 '무풍지대' 아니다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4>)

ESG경제 | 2023.06.14

국내 ESG 뉴스

금융위 'ESG 공시제도 로드맵' 3분기 내 발표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60559)

내일신문 | 2023.05.12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발표... 정부 참여 '자율규제' 운영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2417060620326>)

머니투데이 | 2023.05.24

국내 ESG 플랫폼 하나로 묶는다... 한국거래소 정보 통합은 장기 과제

(<http://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763>)

ESG경제 | 2023.06.02

국내 500대 기업 여성임원 6.8%... 사외이사 늘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30/119549178/1>)

동아일보 | 2023.05.31

KIEP "韓 ESG 대응 미흡...제도적 인프라 정비 필요"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61216042416768>)

부산일보 | 2023.06.12

ESG 통계 지표

2023년 6월 20일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개)

	'22.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188	199	203	201	200	212	212	213	215	221	227	231
사회적채권	946	966	1,006	1,032	1,045	1,069	1,070	1,083	1,103	1,138	1,164	1,201
지속가능채권	304	305	309	308	309	300	299	298	300	299	297	290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 잔액

(단위: 천억 원)

	'22.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3.1월	2월	3월	4월	5월
녹색채권	186	191	194	193	193	200	200	201	205	210	215	217
사회적채권	1,428	1,460	1,523	1,547	1,558	1,586	1,572	1,565	1,576	1,638	1,666	1,713
지속가능채권	213	217	220	219	218	213	213	213	213	212	211	214

2. ESG 평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8	14	20	38	78	131	10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지배구조보고서	76	101	213	224	231	355	380

자료: KRX ESG 포털

3. 기타 통계

RE100 참여 국내외 기업(기관) 누적 수 * CF100 참여 기업 수: 121개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국내	-	-	-	6	14	27	33
글로벌	101	141	204	269	335	393	411

자료: <https://www.there100.org/re100-members>

2023년 ESG 뉴스레터 이슈 주제

1월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의 동향과 시사점	7월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고시 해외 논의 동향
2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기후 금융의 역할	8월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과 활용방안
3월 탄소배출 MRV(측정·보고·검증) 분야의 성장과 그 의미	9월 탄소중립 분야 국가 R&D 현황 및 과제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산업계 영향	10월 배출권거래제 쟁점과 개선과제
5월 EU 탄소중립산업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월 ESG 기업 공시 의무화 현황과 대응방안
6월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 과제	12월 UN기후변화협약 결과와 의미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지속가능경영원

지속가능금융 현황 및 발전과제

김범준 과장
T. (02)6050-3475 | E. kbj@korcham.net

국내외 ESG 뉴스

김범준 과장
T. (02)6050-3475 | E. kbj@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권우혁 연구원
T. (02)6050-3473 | E. william@korcham.net